

# 동일Focus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동일 Focus



# 북한핵문제와 동북아 평화

2015. 4.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1994년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진행되었으나, 9.19 공동성명 이후 중단 상태에 있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확대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 실험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 배치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안보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 안보협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이라는 주제로 4월 23일 개최된 좌담회는 김영수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재천 교수(서강대)와 박휘락 교수(국민대), 이기동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호령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그리고 홍규덕 교수(숙명여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 마·중 갈등구도가 동북아 평화협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 확고한 비핵화 원칙과 통일한국의 구체적인 비전 제시해야

◎ 김영수 서강대 교수(사회) :

오늘 좌담회의 논의 주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 환경과 주변 정세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일단 북한 핵문제부터 짚어 보고자 합니다. 북한 핵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6자회담의 유용성과 개최 가능성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과제는 무

동일Focus

### ▶좌담

- 김 영 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회)
- 김 재 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박 휘 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이 기 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이 호 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홍 규 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었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사드(THAAD) 배치문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미관계, 한·중관계와 같은 동북아의 평화안보 협력 방안입니다. 즉, 동북아 정세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준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규덕 교수님께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 북한이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문제가 불거진 것이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의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등 핵탄두를 대륙간탄도탄(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으며,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의 확보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통해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단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1차 북핵 위기와 2차 위기를 거치면서 주변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는 이란 핵문제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핵문제가 협상으로 가게 된 것은 1차 북핵 위기 때의 제네바회담과 제네바 합의 이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 핵문제가 북한 핵문제 보다 쉽게,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포기나 폐기를 유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한 6자회담이 포기나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망(wishful thinking)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6자회담에 의존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에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란 핵문제는 어떻게 타결되었는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과시하였고, 공군기의 비행 시위 등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으로,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 조약에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다가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탈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유되었으며,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공중 공격에 의하여 핵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압박을 해온 것이지요. 따라서 이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합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채찍(stick)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도 내보인 적이 없습니다. 채찍과 당근이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근만 주었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근보다 채찍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당근과 채찍의 균형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 핵문제,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 **김재천 서강대 교수**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있는데, 일단 북한 핵 위기가 전보다 훨씬 위중해졌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소형화되고 경량화 되어 가고 있고 전진배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탄을 실험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핵문제는 억지와 대화, 투 트랙(two track)을 유지해 나가



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억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등을 통해 한국 자체의 억지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하고, 미국과의 공조도 더욱 공고화해야 합니다.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8년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비핵화의 탈핵화’, 즉 비핵화 협상에서 핵문제가 부차시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을 자국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활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비확산, 중국은 북한 정권 안정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의 계기,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동상이몽의 회담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2월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다오위 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따라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는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2007년 2.13 합의와 10.3합의가 있었지만, 합의 이행이 좌절된 이유가 바로 자국의 이해 관계를 중시하는 동상이몽의 접근방식 때문입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6자회담의 기본 취지인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김영수 교수**(사회) :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문제에 관한 진전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 핵문제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란 핵문제가 북한 핵문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호령 박사** : 이란의 핵문제를 보면서, 북한 핵문제는 보다 긍정적으로 풀리기보다는 더 답답하고 더 긴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국가 중 미국, 중국, 러시아는 6자회담 참여 국가들로, 이들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이란 핵문제 해결은 원유, 중동 지역의 영향력 등 자국의 직접적 이익과 연계

#### 킬 체인 [ kill chain ]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으로,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공격수단 선정,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2014년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으로 한국형 킬 체인을 구축하여 이상 징후 탐지 30분 내에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와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합의와 파기가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 자체가 이들 국가들에게 바로 직접적 이익과 연계되는 효과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난 20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동북아의 안전문제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단거리 미사일문제, 재래식 무기 판매

####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상 20km 내외의 하층 방어체계,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미사일 (PAC-2)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특히 우리군은 조기경보체계로 이지스함체계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SPY-1D 레이더와 탄도단 조기경보 레이더인 이스라엘제 그린 파인 레이더가 표적탐지를 담당하고 있다.

등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또 다른 문제의 가능성을 재고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란 핵문제 해결방식, 북한 핵에 적용하기 어려워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이기동 박사** : 최근에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케이스는 대략 21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란 핵문제 해결방식이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에 기계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문제에서 보여 준 적극성을 북한 핵문제에서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굳이 북한 핵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달구어서 자신의 손이 데이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바마 정부는 남은 임기를 북핵문제를 관리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점증하는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증강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핵 보유를 천명하고 헌법에

명문화시킨 북한의 협상 태도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북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인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지만,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6자회담의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교수**(사회) :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자회담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홍규덕 교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6자회담 무용론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번 팔았던 말을 다시 살 수 없다는 (do not buy the same horse twice)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이 없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내년에는 미국도 다음 선거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불리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기존의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쿠바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란 핵문제에 있어 실마리가 보이는 상황이 진전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조금만 더 진지한 태도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6자회담 진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망스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공감 속에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그간의 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핵보유국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다자 외교 채널 통해 북한 핵 관리해야

◎ **김재천 교수** :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비핵 외교가 더욱 더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 등 외교적인 방안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디만, 그래도 다자적인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는 북한 핵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교적으로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러까지 북한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컨센서스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빅터 차 박사가 북한 정도의 핵 능력을 개발해서 포기한 나라는 없다고 얘기했듯이 북한 핵문제는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더 제고하고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차단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동 박사** : 북한의 핵능력이 지난 2008년 이후 7년여 동안에 고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6개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비용 상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교환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5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상승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6자회담을 가동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속도조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호령 박사** :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발언한 것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한 데 이어 세 가지 접근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였을 때 외교적인 노력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오히려 압박과 제재, 억제를 더 강화해 가는 추세로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6자 회담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



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 1월의 행정 명령에 의해서 보다 다양한 곳에서 압박을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압박과 제재가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외교적인 노력은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외교적 노력이 이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였을 때 외교적인 노력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오히려 압박과 제재, 억제를 더 강화해 가는 추세로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6자회담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김재천 교수** : 최근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가 발족했는데, 미국의 핵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방침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TO의 핵계획그룹(NPG)과 같이 한·미·일 간에 이러한 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핵 운영정책에 더 깊이 관여해서 시나리오를 더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을 더욱 확실하게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도 우리에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략적으로 균형이 깨져서 불균형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 북, 6자회담 재개돼도 분리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 있어

◎ **이기동 박사** :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지난 7년 간 꾸준히 발전시켜 온 핵 능력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핵 보유 전략 차원에서 현재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자 할 것이고, 미래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협상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자회담의 의제가 분열되어 과거보다 훨씬 더 난해한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는 지난한 협상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자회담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북한의 핵능력을 감소시키고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회담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교수(사회)**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

###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지난 4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한국과 미국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출범하기로 한 기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온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지만,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꺾지 말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자는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북한 미사일문제인데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홍규덕 교수** : 예. 저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KN-08이라든지 무수단과 같은 중장거리 ICBM 개발로 인해 북한의 공격 가능한 목표가 한반도 전구를 뛰어 넘어 유사시 지상군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증원이 이루어질 미 영토와 해외 주둔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자신이 전쟁의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갖고 언제든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조장은 이러한 점에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라고 봅니다.

한·미 정보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드(THAAD) 배치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 본토를 대상으로 한 KN-08 뿐만 아니라, 무수단과 대

**핵계획그룹 NPG [Nuclear Planning Group]**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 공동협의체.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 핵무기 운용 및 핵 위협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지역 내 핵 확산 통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다. 1960년 말 설립했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회원국들이 참가하고 있다.

포동 등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 4,000km 이상을 날아가서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사시에 괌이나 오키나와라든지,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실험했듯이, 로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올려 한반도 내의 전략목표들을 공격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요격수단인 사드(THAAD)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말단계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100~120Km 상공에서 일차적으로 요격이 가능해야 40 Km 이하의 하층단계에서 우리가 보유한 PAC-3로 2차 요격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확대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2014년 10월 2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이 합의한 새로운 억지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의 가동은 바로 양국이 탐지부터 파괴까지 4D 운영 개념을 공고히 하며,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관한 정치적 질문에 고민하기 보다는 우리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북 미사일 실험, 미국에 더 많은 양보 강요하기 위한 수단

◎ **이호령 박사**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거에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위협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무수단과 KN-08 같은 경우,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포동-2 미사일 사거리를 6,700km로 평가해오다가 올해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는 사거리를 1만km 이상으로 재평가했듯이, 미국의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한테는 핵보다는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이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패트리엇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사드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무기이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한 미사일에 관한 이슈에 있어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우리 보다는 주변 국가들에게 주는 위협의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주변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강도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 **박휘락 교수** : 앞에서 이호령 박사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미국에 대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과 한국에 대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탄두가 더 작아져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은 거리가 더 멀수록 무거운 탄두를 싣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현재 북한의 기술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탄두 무게가 500Kg 정도 이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워낙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하는데, 이 경우 1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아직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생각해 보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소형화는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김재천 교수**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그동안에도 그래 왔지만, 미국에 대한 대응,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

#### PAC-3

제1차 걸프전 당시 쓰였던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신형. 목표 발견에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에 비해 크게 단축되었고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방식으로 명중률과 격추율이 높아,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스커드미사일을 100% 가까이 요격했다.

리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미국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해빙무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소 온건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 미사일, 탄두 소형화가 최대 이슈

◎ **이기동 박사** :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속적으로 단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부쩍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찬성 입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 **박휘락 교수** :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능력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킬 체인(Kill chain)이나 KAMD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현재 미국의 기술정보(techint)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정보 자체가 한계가 있고, 미국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우 인적 정보(humint)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험성이 있고, 처음에는 신뢰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경우 상당할 정도의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기술정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교수**(사회) : 최근에 사드(THAAD) 배치문제가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핵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다고 보는지요? 그에 앞서 논란이 되는 사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THAAD, 군사적으로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

◎ **이호령 박사** : 사드(THAAD)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해의



북한이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KN-08



요격을 위해서건 선제적 공격을 위해서건 가장 핵심적 요소는 탐지 능력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공위성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킬 체인(Kill Chain)이나 KAMD 체제를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2020년까지 KAMD와 킬 체인(Kill Chain) 등 대공 방어능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미국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풍기는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의 배치 문제는 논란의 여지와 상관없이 군사적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체제가 방어하는데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드(THAAD)가 더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의 논란은 이런 군사적인 논리가 정치적 이슈 또는 외교적 이슈와 결합되면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좀 흐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천 교수** : 사드(THAAD) 배치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의

#### KN-08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신형미사일이다.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2015년 4월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미사일에 장착해(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바 있다.

도한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논거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드(THAAD)와 AIIB가 연계되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됐기 때문에 모호성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중 경쟁관계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한다면 이런 경우가 일과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 **홍규덕 교수**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2016-2020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킬 체인(Kill chain)과 KAMD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대응력과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배치문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공방위에 있어 사드(THAAD)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MD에 편입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에는 아

####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여 발사되는 사정거리 6400km 이상, 로켓엔진으로 추진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긴밀한 상호 정보 교환입니다. 엇그제 발표한 중기계획에서 우리 스스로 L-SAM을 개발기로 했습니다만, 우리의 영공방위는 우리의 힘으로 하되 미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격을 위해서건 선제적 공격을 위해서건 가장 핵심적 요소는 탐지 능력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공위성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킬 체인(Kill Chain)이나 KAMD 체제를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 사드 배치문제, 주권적 · 자주적 결정사항 강조돼야

◎ **박희락 교수** :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논란에 있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군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가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됐다.

하여 본토에 보유하고 있는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자신의 무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군 보호가 주 목적이지만 한국 방어에도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사드(THAAD)를 설치하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미국을 향하여 발사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ICBM은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도 않고 시베리아 쪽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와 중국의 ICBM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0~5000km에 달하여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 레이더 능력은 600km 내지는 1000k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좁은 각도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하여 설치될 경우 중국 쪽은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드(THAAD)는 검증도 되지 않은 무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20년 이상 노력해온 무기이고, 미국이 전력화했다면 요구 성능을 충족시켰다는 말입니다. 미군이 시원치 않은 무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면 중국과 관련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동안 한국에서 일부 인사들이 제기하였던 사드에 관한 논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의 왜곡으로서 반미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루머로 봐야 합니다.

#### L-SAM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50~60km 상공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2014년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의결되어, 올해부터 3년간 탐색개발, 이후 5~6년간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 2020년대 초반에 양산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 **홍규덕 교수** : THAAD배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하는 등 한·중간에 신뢰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또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도 대 인공위성 파괴 실험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끊임 없이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드(THAAD)가 기본적으로 방어용이며, 한국 안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공군 비행장에서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



안보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또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중관계의 상호보완적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 **박휘락 교수** :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상에 PAC-3 17개 포대를 갖고 있고, 해상에서는 4척의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을 8척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상의 요격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드(THAAD)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해상용인 SM-3를 지상용으로 전환한 것을 구매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동안에 중국은 그것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중국의 발언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간섭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이 사드에 대하여 반대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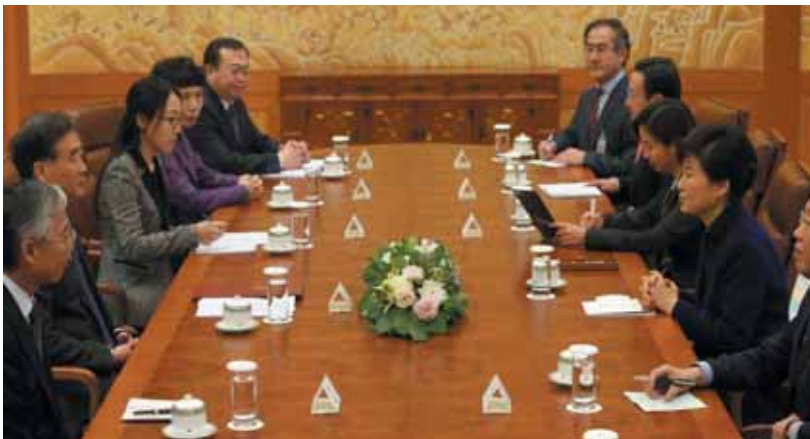
저는 최근의 사드(THAAD) 배치와 관련된 논란은 선동루머이고, 이것이 중국의 간섭으로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익과 국민 합의 바탕한 원칙외교 필요해

◎ **김재천 교수** : 이제는 우리의 외교국방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이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무기체계라면 중국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외교 보다는 원칙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익에 따라 주변국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THAAD가 필요하고, 우리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AIIB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방한 중인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구두 친서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조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건강한 한·미관계가 되고 신뢰의 한·중 관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 **이기동 박사** :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호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경우, 안보는 철저히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는 확실성에 기초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미국은 믿을 수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국가이므로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죠. 이러한 호주의 태도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도 문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호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가 찾아야 할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확고한 원칙을 내세우는 가운데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미사일 발사 장면

◎ **이호령 박사** : 사드 문제는 군사적 시각과 더불어 자주국방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국방 측면에서는 비용과 효과를 따져볼 수 있는데,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보다 많은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외국의 방어무기를 구입하여 배치하면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외국의 무기 구입은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국방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길게 본다면 비용이 다소 들지만 기술력과 개발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L-SAM 등을 개발해 가면서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해 단기간에 배치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통일 이후 까지를 내다보면서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THAAD) 문제도 단순히 정치·외교적 논리에 의해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김영수 교수(사회)** : 북한핵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한·미 안보동맹과 한·중관계의 상관관계,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중·러 관계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휘락 교수**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비교하여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상호보완관계와 대체관계를 함께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대체관계가 더욱 커졌



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확산의 저지라는 목표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리 또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대응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전략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북한에 대한 대응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관리 또는 대응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임을 천명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규덕 교수** :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좀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준수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주도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매우 적절해

◎ **김재천 교수** :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는 한·미관계에만 올인할 수 없는 지정학적 입장입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모두 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자관계도 중요하지만 다자주의적인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에 올인해서 그들의 안보이익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밝혔는데 매우 적절한 구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국가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과거사문제에 얽혀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패권적 야심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역사가 없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 **이호령 박사** :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북·중·러 관계 등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다자외교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9·19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실무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실무그룹은 러시아가 좌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러시아가 좌장을 맡고 있는 이 실무그룹, 동북아협력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소프트 이슈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나중에 하드 이슈로 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신뢰외교’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다. 하지만 기존의 실무그룹에서는 곧바로 하드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동해 보자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희락 교수** :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충분한 힘, 즉 국방력을 갖는 것입니다. 구한말 고종 때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이 일본에 수신사로 간 김홍집에게 책략을 얘기하면서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는 제비와 참새처럼 안락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동북아의 질서와 정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처지를 모르고 주변국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위급한 처지인데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이 연작처당(燕雀處堂)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질서와 정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처지를 모르고 주변국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위급한 처지인데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거나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힘과 역량 갖춰야 동북아 평화협력 주도할 수 있어

◎ **김영수 교수**(사회) :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 주변국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하는 그런 통일입니다. 또한, 핵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핵 없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실현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천 교수**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을 말씀 하신

이후 다소 수그러들었던 통일담론이 다시한번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또 다소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너무 경제적인 편익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통일 편익만 강조하는 통일담론이 한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라고 봅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북한의 잘못된 대남정책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렇게 딱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과연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비관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2010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펼쳐진 조선노동당 창건 64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충분한 힘, 즉 국방력을 갖는 것



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드레스덴 선언 등 ‘작은 통일’ 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통일’ 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는 동반되지 않고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통일’ 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5월이나 6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향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작은 통일’ 추진 위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

◎ **이기동 박사** :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 주변국에 도움이 되고 그들이 축복하는 통일, 그리고 ‘핵이 없는 한반도’ 를 만드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앞서 ‘통일대박’ 이 경제적 편익에 너무 치중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통일대박’ 은 경제적 비용과 편익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 안보적 측면에서 ‘통일대박’ 은 양 날의 칼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많은 분단비용을 알게 모르게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런 소모적인 분단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교적인 통일편익, 즉,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대박이 됩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에게는 대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편익이라는 것은 동북아와 남북한 사이에 공동의 이익 창출, 이익의 극대화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지만,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편익은 주변국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 국가들이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안보적 편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호령 박사** : 통일준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통일 편익만 강조하는 통일담론이 한계를 보인 것



다.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은 북한식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북한 행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말을 뒤집는다면, 북한은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 핵문제라는 것은 우리 주도,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또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그런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 핵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북, 자기 주도 통일 때까지 핵 포기 하지 않을 것

◎ **박희락 교수** : 우리가 ‘통일’ 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통일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나 김일성주의에 의한 통일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통일을 말하면 흡수통일을 하고자 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말할수록 북한은 더욱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통일’을 말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의 최초 단계인 화해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협력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과 대화할 소지도 많고, 북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윈윈(win win)하면서 궁극적인 통일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천 교수** : 박휘락 교수님께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리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호령 박사** : 저는 통일준비와 실현과정에 있어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남북관계 측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군사적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변국가 측면에서 통일외교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주변국가 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통일한반도가 주변국가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국민 측면에서 통일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으로 통일의 이슈화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크게 체

감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교육에서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다만 단어는 습득했는데, 이 단어가 본인들의 몸에 제대로 느껴져서 정말로 통일된 미래가 얼마만큼 밝고 좋은지, 이익이 되는지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통일 미래가 얼마나 좋은지, 이익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 **홍규덕 교수** :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해 국내 주요 도시에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통일공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014년 3월 1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국민통일공감대회



미·중 관계가 굉장히 지난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긍정적  
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우  
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야 할 것



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한반도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과 남북한이 통일됨으로써  
주변국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나 비  
전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에 어떤 목표와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변국가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에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된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이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잘 훈련되고 조직화되고 강력한 우리 군이 통일 이후에 전 세  
계의 불안정한 지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좀 더 평  
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 담당할 수 있다는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  
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교수**(사회) :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현재 상황

에서 정확하게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모두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하지 못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시죠.

◎ **김재천 교수** :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통일외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모든 것이 막혀있고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주변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이기동 박사께서 우리의 외교·안보적인 편익을 강조하면 주변국이 반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동북아에 안보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큰 명



2013년 10월 1일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식에 나선 현무-3 순항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1500km로 북한 전역의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제에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의 갈등구도가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구도가 북한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쳐놓고 싶지만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것이지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견제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문제로 있는 것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관계도 중요하지만 다자주의적인 그런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지난한 과제이지만 하지만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동북아 평화협력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 틀 구축해야

◎ **이호령 박사** : 이란 핵문제가 합의를 보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의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이지요. 이란 국민들이 실각한 이전 정권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에서 경제 제재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고, 새 정권이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외교에 있어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균형외교 보다는 non zero sum game으로 우리의 몸 값을 높이는 이슈를 개발하고 자주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 **박희락 교수** : 제가 보기에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도로 그동안 너무 유화책을 강조해 왔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유화책과 강경책이 병행될 때 유화책이 제대로 작동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3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일과 안보의 관련성 문제에 있어서도, 안보의 해결 없이 통일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통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통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보만 강조해도 곤란하지만, 안보를 무시한 통일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교수**(사회) : 예, 긴 시간에 걸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벽부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서 통일사업을 벌이시는 자문위원들의 통일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7focus*



## 6자회담 개최 현황 및 주요 합의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 6자회담 개최 현황

| 구 분    |        | 개최 기간         | 주요 결과                                                                 |
|--------|--------|---------------|-----------------------------------------------------------------------|
| 제1차 회담 |        | 2003.8.27~29  |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제2차 회담 |        | 2004.2.25~28  | 한반도 비핵화, 평화로운 해결 원칙 재확인                                               |
| 제3차 회담 |        | 2004.6.23~26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의 필요성.<br>'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별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 제4차 회담 | 1단계 회의 | 2005.7.26~8.7 | 9·19 공동성명 채택                                                          |
|        | 2단계 회의 | 2005.9.13~19  |                                                                       |
| 제5차 회담 | 1단계 회의 | 2005.11.9~11  | 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 의지 확인                                                |
|        | 2단계 회의 | 2006.12.18~22 |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재확인 및 이행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
|        | 3단계 회의 | 2007.2.8~13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2·13 합의)                                    |
| 제6차 회담 | 1단계 회의 | 2007.3.19~22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
|        | 2단계 회의 | 2007.9.27~30  |                                                                       |

출처 : \*2014 북한이해하기 / 통일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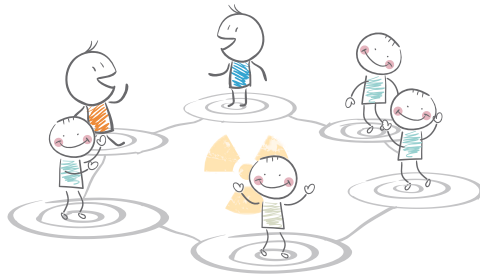
●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
| 9 · 19 공동성명<br>(2005.9.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li> <li>－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침공 의사 부재 확인</li> <li>－ 북한은 평화로운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 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에 동의</li> </ul> </li> <li>• 관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 북은 상호 주권 존중, 평화공존, 관계 정상화 조치</li> <li>－ 일 · 북 관계 정상화 조치</li> </ul> </li> <li>• 대북 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 경제 협력 증진</li> <li>－ 대북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li> <li>－ 한국은 200만kW 전력 공급 제안 재확인</li> </ul> </li> <li>•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당사국들 간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협상 개최</li> <li>－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모색</li> </ul> </li> <li>• 이행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별로 상호 조율된 조치</li> </ul> </li> </ul> |
| 2 · 13 합의<br>(2007.2.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단계 이행 계획 :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li> <li>－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li> <li>－ 미 · 북관계 정상화 양자 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li> <li>－ 일 · 북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li> <li>－ 중유 5만톤 상당 에너지 지원</li> </ul> </li> <li>• 5개 실무그룹 구성 :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미 · 북관계 정상화, 일 · 북관계 정상화, 경제 · 에너지 분야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li> </ul> </li> <li>• 다음 단계 이행계획 : 최 단계 완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li> <li>－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 · 에너지 · 인도적 지원 제공</li> </ul> </li> <li>• 6차 장관급회담 개최 : 초기 단계 완료 이후</li> <li>• 한반도 평화체제 : 직접 관련 당사국 간의 별도 포럼에서 협상</li> </ul>                                                                                                                                                       |

•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
| 10·3 합의<br>(2007.10.3) | <p>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li> <li>•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li> <li>•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li> <li>•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li> <li>•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노력</li> <li>•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li> </ul> |

출처 : \*2014 북한이해하기 / 통일교육원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이 참가한 6자회담이 2007년 2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관해 합의했다.

이 자료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평화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과 한반도 통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통일포커스 제9호

발행일 2015년 5월 23일  
발행인 박찬봉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실 02)2250-2265  
제작처 이호기획 02) 441-1491

※이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Focu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